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_20150129

Right to Health News at a Glance(2015.1.16.~1.29)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회

1.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무기한 연기(1/28)

- 2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해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다. 정책을 신중히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짐
-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문 장관은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준은 완화하고 일부 무임승차하는 것은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자가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 부담이 늘어나면 불만이 증가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함
- 한편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발표가 무기한으로 미뤄지며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보는 시각이라는 분석. 지난해 담뱃세 인상으로 홍역을 겪었고, 올해 초에는 연말정산으로 또다시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 여기에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인한 부담이 증가할 경우 여론을 견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무기한으로 미뤄다는 분석이 다수¹⁾

1-1. 각계 반응

- 청와대는 29일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발표가 사실상 백지화된 것과 관련, “백지화된 것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힘.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
-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원내부대표는 “소득 많은 사람은 더 내고 소득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게 사회보험의 원칙”이라면서 “이에 맞는 개선방향을 정부 스스로 포기한 것은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서민증세 기조는 계속 유지하려는 선언”이라고 주장
- 건보공단노조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국정과제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 2013년 7월부터 각계의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기획단이 공단의 모든 데이터와 국세청 자료를 이용해 개선안을 만들었다”며 “하지만 발표를 불과 하루 앞두고 문형표 장관이 부과체계 개선안 백지화라는 도발로 국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이는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 “급기야 복지부는 28일 '백지화'로 돌변하는 폭거를 자행했으며 우리 노조는 5,000만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1%의 고소득 부자를 위해 99% 국민의 여망을 짓밟은 만행을 저지른 문형표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29일 성명을 내고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의 개편안은 보완할 점도 있지만 큰 틀에서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며 “돌연 논의 백지화는 황당한 정책 후퇴이며 정치적 셈법에만 치우친 결정”이라고 비판

2. 복지부, 성실공익법인 인정 전 의료법인 자회사 ‘조건부 허가’(1/26)

- 의료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는 병원의 영리자법인(영리자회사) 설립 허용과 관련해 정부가 애초 정한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곳에 조건부로 허가

-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관련 복지부 장관 인정(허가) 검토 보고’ 문서를 보면, 복지부는 지난달 18일과 19일 참여의료재단(서울 송파구 소재)과 혜원의료재단(경기 부천시 소재)이 신청한 자회사를 ‘조건부 허가’ 결정

-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가한 사례는 이 두곳이 처음. 노인전문병원 2곳과 강남구립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참여의료재단은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과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관광 사업 등을 하는 자회사를,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혜원의료재단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자회사를 세우겠다고 신청

- 복지부는 현재 성실공익법인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의 확인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림. 복지부의 이런 결정은 ‘기재부에서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아야 자법인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어긴 것이어서 논란²⁾

2-1. 의료법인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시, 자법인 주식에 대한 증여세 바로 면제(1/20)

- 기재부는 지난 19일 ‘1~6차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성과 및 보완방안’을 통해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성실공익법인이어야 하는데 요건을 충족한다면 ‘심사’ 과정을 줄여주고, 또한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시 자법인 주식에 대한 증여세도 면제해 주기로 함

- 기재부는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를 익년도에 심사, 확인하므로 요건을 갖췄어도 확인받기 전 자법인 설립 가능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완화 이유를 설명

- 의료법인이 자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우선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의료법상 주무관청인 시도지사로부터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 자법인을 설립. 하지만 기재부 발표 후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법인이 많지 않아 실질적으로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기재부가 후속대책으로 완화조치를 내놓은 것³⁾

3. 한의사 의료기구 사용 범위에서 일단 X레이와 초음파 제외될 듯(1/22)

- 대한의사협회장이 단식투쟁까지 하는 등 의사와 한의사간 극심한 대립을 빚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에 대해 복지부는 엑스(X)레이와 초음파는 허용 대상 논의에서 제외할 방침. 22일 문형부 복지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가 제시돼 있다”며 “판례를 기준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힘

- 권덕철 복지부 보건 의료정책실장도 “판례 중 행정부 해석과 지침으로 풀 수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유권해석을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 허용 범위를 정할 것”이라며 “현재와 법원은 각각 초음파와 엑스레이에 대해 한의사 면허 범위 밖이라고 판단을 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을 고치려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 이러한 발언에 따라 현재 복지부에서 논의 중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

용 논의에서 초음파와 엑스레이는 제외될 전망

- 반면 2013년 현재 결정에서 인정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포함될 것으로 예측4)

4. 원격의료 올해 본격화...시범사업 50곳 확대(1/22)

- 보건복지부는 22일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 이에 따르면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난해 9곳에서 올해 50곳으로 확대. 추가로 늘어나는 41곳 가운데 11곳은 이미 연초에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원격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20곳에 달한다. 복지부는 연내 30곳을 추가한다는 방침.

- 이와 별개로 원양선박과 군부대, 교도소 등에서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3월부터는 일부 원양선박과 병원간 전화를 통해 소화불량 등 경증질환을 진료하고 선박내 구비된 의약품을 처방할 예정. 현재 군부대 2곳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전방부대로 확대하고, 교도소 원격진료도 29곳으로 확대

- 4월부터는 농어촌 응급환자에 대한 실시간 원격협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시범 적용. 병원이 없는 농어촌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인근 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을 필요한 조치한 뒤 대형 거점병원 전문의와 휴대전화로 협진하면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 당초 올해 복지부에 배정된 원격진료 시범사업 예산은 9억원. 복지부는 미래창조과학부의 R&D 예산에서 나머지를 충당한다는 방침5)

5. 올 국립대병원 11곳 등 공공기관 임금 동결(1/18)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결과와 후속조치 계획'을 의결하면서 지난해까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국립대병원 11곳의 올해 임금을 동결키로 함

- 기재부에 따르면 우선, 302개 공공기관 중 290개 기관(96%)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했으나 자율관리기관 중 13곳은 계획을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이로써 서울대·경북대·강원대·충북대·충남대·전북대·전남대·경상대·제주대·서울대치과·부산대치과 등 국립대병원 11곳을 포함해 국토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부설기관) 등의 임금이 동결

- 다만, 취업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오는 7월 이행 여부를 확정. 취업규칙이 개정되면 임금인상분을 소급, 적용할 방침6)

- 보건의료노조는 해당 결정이 알려지자 크게 반발.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협박을 무기로 가짜 정상화대책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국가폭력의 극치라는 것. 국가가 앞장서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것은 위법적인 국가폭력이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7)

6.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 강화(1/28)

-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현재보다 강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8일 "기초생활수급자의 체력, 만성적 증상 등을 확인하는 활동능력평가를

15개 항목·평가기준에서 15개 항목·26개 평가기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는 18세 이상 64세 이하 4급 이내 장애인, 재학생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시스템.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등을 기초로 심사하는 의학적 평가와, 대상자를 방문해 대면 심사하는 활동능력평가 등 2단계로 진행
- 복지부는 정확한 의학적 평가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연금공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료 보관을 요청할 경우 추가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해, 이에 따라 연간 5000여명에게 평균 1만원 가량이 지원될 예정⁸⁾

7. 보건의료산업 동향

인천 송도 '한진메디컬컴플렉스'사업 무산(1/13)

- 한진그룹이 인천 송도에 짓겠다고 약속한 비영리국제병원사업이 무산.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사건의 여파와 인천시의 의료법인 관련 정책 변화의 여파 때문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3일 지난 2013년 10월 인천시, 한진그룹, 인하대 등이 맺은 ‘한진메디컬컴플렉스(가칭)’ 건립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가 지난해 말부로 해지되면서 사업이 백지화됐다고 밝힘. 한진그룹은 당초 지난 2014년 5월까지 송도 5·7공구 8만여㎡ 부지내에 5천억여원을 투입해 1300병상규모의 비영리국제병원을 짓기로 한 바 있음.
- 인천경제청관계자는 “이미 두차례 MOU기한을 연장했기 때문에 또다시 연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 자동해지했다”며 밝힘

KT-연세의료원 합작사 후헬스케어 "올 매출 145억 목표"(1/28)

- 지난 2012년 출범 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KT와 연세의료원이 공동 출자해서 설립한 후헬스케어가 올해 신사업에 착수, 본격적인 수익 창출에 나설 것으로 보임. 연세의료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현 버전인 u-Severance 2.0을 고도화하는 것을 필두로 오는 3월 병원 연구자재 B2B 온라인 몰 사업을 론칭,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한다는 전략
-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올해 145억 목표 매출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회사는 예측
- 후헬스케어는 내달 u-Severance 3.0 1단계 구축 프로젝트에 착수. 해당 사업은 약 50억원 규모로 약 1년 간 진행될 예정.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제한입찰경쟁 공고를 내고 최근 소프트센, LG CNS와 계약을 체결. 고도화 작업 완료 이후에는 솔루션을 패키지화해 타 의료기관으로의 확산 기반을 마련할 계획⁹⁾

43개 상급종합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석(1/20)

- 세브란스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이 약 1009억원으로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 뒤로는 서울아산병원 660억원, 강남세브란스병원 545억원,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215억원, 길병원 210억원을 기록
-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보유한 의료기관은 총 25곳. 25개 기관의 전입액 총액은 약 4326억원이고, 이를 43개 상급종합병원으로 나누면 1곳 당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은 평균 100억원대

- 한편 2010년 감사원의 지적으로 2013년 보건복지부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¹⁰⁾

2013년 상급종합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현황		
단위(원)		
순위	기관명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	세브란스병원	100,991,013,017
2	서울아산병원	66,000,000,000
3	강남세브란스병원	54,500,000,000
4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21,500,000,000
5	길병원	21,000,000,000
6	계명대학교동산병원	20,300,000,000
7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20,000,000,000
8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18,200,000,000
9	영남대학교병원	17,976,793,647
10	부산대학교병원	15,500,000,000
11	동아대학교병원	13,477,000,000
12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12,012,684,104
13	건국대학교병원	12,000,000,000
14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	10,000,000,000
15	분당서울대학교병원	6,000,000,000
16	순천향의대부속순천향병원	5,500,000,000
17	경북대학교병원	4,410,000,000
18	중앙대학교병원	3,500,000,000
19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3,000,000,000
20	고려대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3,000,000,000
21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1,000,000,000
22	원광대학교부속병원	1,000,000,000
23	고신대학교복음병원	662,632,155
24	강북삼성병원	598,000,000
25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500,000,000

8. 의약품제약

식약처 "허가특허연계법, 설 전 국회 통과 목표"(1/20)

- 식약처는 오는 3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허가특허연계제도 내용을 담은 법안의 설 전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2월 2일 개회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상황

- 개정안 골자는 특허장벽을 깨고 출시된 퍼스트제네릭 품목에 1년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인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떠한 결론이 도출될 지 주목.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제네릭 독점권 부여 금지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 이어서 식약처 발의안과 김 의원 등의 발의안 병합심의 가능성도 예고되고 있는 현실

-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3월 허가특허연계제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관련

업계 의견을 다시 수렴해 7월 재입법예고를 했다. 이후 입법과정을 거쳐 10월 22일자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¹¹⁾

9. 기관·협회 뉴스

이번엔 한의사협회장 단식...의료기기 사용 갈등 심화(1/28)

- 대한의사협회장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단식 투쟁에 돌입.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은 28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즉각 허가해야 한다”며 단식에 들어감

- 김 회장은 선언문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건강증진과 불편 해소, 한의학의 과학화를 이뤄낼 수 있는 규제 기요틴(단두대)의 핵심”이라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힘

-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협회장이 단식을 한 지 이틀 만에 복지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등 사실상 투항했다”며 “이에 대한 항의 의미로 단식을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¹²⁾

식약처, 의료기기 1·2등급 공공기관 위탁 인증제 도입(1/28)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8일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따른 의료기기 신고·인증관리, 허가 전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도입 등을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을 개정·공포

- 인공심장박동기 등 위해도가 높은 3·4등급 의료기기는 식약처에서 허가·심사하고, 수동식 휠체어 등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가 거의 없거나 낮은 1·2등급 의료기기의 신고·인증 업무를 공공기관인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위탁 수행. 7월29일부터 시행

- 제조소별로 제조업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기업체가 여러 개의 제조소를 갖는 경우 하나의 제조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조소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제조업허가변경을 통해 제조소 소재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업계 부담을 완화¹³⁾

의협, 규제기요틴 저지 비대위 본격 가동(1/28)

-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 정부 규제 기요틴에 대항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가동하기로 의결. 의협 집행부, 16개 시도의사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 관련 학회 대표자가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고 비대위 위원장에는 추무진 의협회장이 유력시¹⁴⁾

의협 노환규 전 회장, 추무진 현 회장에 결별 선언(1/28)

- 지난 38대 의협 회장 선거에서 추무진 현 회장을 적극 지지했던 노환규 전 회장이 회원들에게 사과하며 추 회장과 결별을 선언

노 전 회장은 “지난 보궐선거(38대 의협 회장 선거)에서 평소 투쟁을 반대하고 원격진료를 찬성하는 소신을 보여 온 후보가 대다수 시도의사회장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무진 당시 의협 정책이사의 출마를 감사히 생각하며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당선을 위해 노력했다”며 “그토록 대의원회 개혁을 갈망했던 저와 회원들의 열망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대의원 들로부터 비대위원장직을 하사받은 것을 기뻐하는 추 회장을 보면서 저의 지난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회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힘¹⁵⁾

산부인과 의원 1인실 급여화...의료계 "반대"(1/22)

- 의협은 분만병원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1~2인실을 포함해 산부인과 의원 입원 실 전체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에 반대의견 제출. 의협은 “상대적 저수가 의료보험 정책 속에서 현실적 상황 고려없이 1인실 급여화를 추진한다면 오히려 산부인과 병 의원의 폐업을 부추기고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힘

- 한편 박광은 의원이 내놓은 건보법 개정안은 산부인과 의원에 한해 병상 수에 관계없이 이용 일수 최대 7일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¹⁶⁾

복지부, 의료계와 ‘호스피탈리스트’ 도입 논의(1/26)

- 정부가 전공의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호스피탈리스트(hospitalist)를 제도화 하는 방안을 검토 하기 시작하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힘. 내과 전공의 미달 사태에 이어 전공의들의 잇단 파업으로 수련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호스피탈리스트 도입을 요구했던 대전협으로서 큰 성과나 다름없다는 의견

-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내과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스피탈리스트 제도에 대해 논의. 이 자리는 전공의 감소로 인한 업무 과중과 이로 인한 전공의들의 잇단 파업 등 사태 심각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마련됐으며, 특히 복지부는 내 과학회에 국내 현실에 맞는 호스피탈리스트의 개념과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을 주문

- 학회가 호스피탈리스트의 개념과 업무 범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제도화에 필요한 연구용역 및 연구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¹⁷⁾

10. 기타

2016년까지 선택진료비 '1조2000억' 보상(1/28)

-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건급여과장은 28일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29 회 병원의료 정책포럼’에서 ‘선택진료비제도 변화와 병원의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

- 정부는 당초 100% 이상 보상원칙을 바탕으로 수가 인상 또는 신설을 통해 상급 8500억원, 중병 2900억원, 병·의원 600억원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보상을 한다는 계획. 정부는 지난해 제도 도입 이후 ▲중증질환 및 수술·처치 수가 인상 ▲다학제진료 등 수가 신설 ▲7대 포괄수가 인상 등을 통해 약 5730억원 가량을 보상했다고 추계

- 또한 올 해에는 의료질향상분담금과 환자안전수가 2개 영역에서 별도 수가를 신설하고 2200 억원을 보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짐¹⁸⁾

미국,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 본격 열리나... 기기 연동 모바일앱 첫 승인(1/26)

- 미국이 의료기기와 연동 가능한 모바일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앱)을 공식 승인. 지난 2013년 모바일 헬스케어 앱 규제를 강화한 이후 2년 만. 워싱턴포스트 및 주요 외신은 26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의료기기 전문 업체 텍스콤이 내놓은 모바일 헬스케어 시스템 '텍스콤 셰어 시스템'을 공식 승인했다고 보도

- 텍스콤의 모바일 헬스케어 시스템은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를 담당의사에게 실시간 전달하고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원격에서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음. 연속혈당측정기(CGMM)를 환자의 피부에 부착한 후 측정기 내부의 조그만 센서를 피부 아래 넣어 환자의 생체정보를 자동으로 모바일 앱에 공유. 환자용 앱과 보호자용 앱이 별도로 있고 환자가 데이터 수신자를 선택할 수 있음

- FDA는 이번 승인과 함께 서비스와 연계한 기기를 시판 전 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등록만 하면 되는 '클래스II'로 분류했다. 현재 비슷한 형태의 기계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벌이는 업체들 역시 기기등록만 하면 팔 수 있다는 얘기¹⁹⁾

에볼라 바이러스, 11개월 만에 진정 국면(1/23)

- 신규 감염자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지난해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렸던 에볼라 바이러스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 본격 확산된 작년 2월 이후 11개월 만. 19일 현재 감염자 수는 2만1600여명

- 신규 감염자 증가 속도가 더디자, 기니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모든 학교의 수업을 재개.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해 폐쇄 조치를 내린 지 5개월 만. 신체 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해 모든 에볼라 사망자 시신을 화장(火葬)하도록 의무화했던 라이베리아 정부는 최근 해당 조치를 철회.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말리 정부는 42일간 신규 감염자가 나오지 않자, 18일 '에볼라 해방'을 공식 선언²⁰⁾

공단·심평원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시 '당사자 통보' 의무화 추진(1/27)

-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등을 위한 목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기록, 보험급여 내역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김성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가입자 개인정보의 법원 및 수사기관 제공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 본부와 6개 지역본부는 법원과 검찰, 경찰에 총 81만6,632건의 개인정보를 제공. 그러나 정작 정보의 주체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는 해당정보의 제공 여부, 사용목적 등을 통보하지 않고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공단 또는 심평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보험급여,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범죄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등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해야 함²¹⁾

-
- 1) '민심 악화에 정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 무기한 유보', 2015.1.28., <쿠키뉴스>
 - 2) '병원의 영리 자회사, 요건 미달인데도 허가 의료 민영화 위한 무리수 의혹', 2015.1.26., <한겨레>
 - 3)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지원사격 나서는 기재부', 2015.1.21., <청년 의사>
 - 4) '한의사 의료기구 사용 범위에서 일단 X레이와 초음파 제외될 듯', 2015.1.22., <세계일보>
 - 5) '원격의료 올해 본격화...시범사업 50곳 확대', 2015.1.22., <아시아경제>
 - 6) '올 국립대병원 11곳 등 공공기관 임금 동결', 2015.1.18., <데일리메디>
 - 7) '국립대병원 임금동결 반발 확산...부당한 협박이다', 2015.1.19., <메디파나뉴스>
 - 8)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강화된다', 2015.1.28., <노컷뉴스>
 - 9) 'KT-연세의료원 합작사 "올 매출 145억 목표"', 2015.1.28., <데일리메디>
 - 10) '세브란스 1009억·아산 660억·강남세브란스 545억', 2015.1.20., <데일리메디>
 - 11) '식약처 "허가특허연계법, 설 전 국회 통과 목표"', 2015.1.20., <메디파나뉴스>
 - 12) '이번엔 한의사회회장 단식...의료기기 사용 갈등 심화', 2015.1.28., <한국경제>
 - 13) '식약처, 의료기기 1·2등급 공공기관 위탁 인증제 도입', 2015.1.28., <약사공론>
 - 14) '의협, 규제기요틴 저지 비대위 본격 가동', 2015.1.28., <라포르시안>
 - 15) '노환규-추무진, 결별?...노환규 "추 회장 당선 노력한 것 사과"', 2015.1.29., <청년 의사>
 - 16) '산부인과 의원 1인실 급여화...의료계 "반대"', 2015.1.22., <메디칼업저버>
 - 17) '호스피탈리스트 도입 논의 시작되자 안도의 한숨 내쉬는 대전협', 2015.1.26., <청년 의사>
 - 18) '2016년까지 선택진료비 '1조2000억' 보상', 2015.1.28., <데일리메디>
 - 19) '미국,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 본격 열리나... 기기 연동 모바일앱 첫 승인', 2015.1.26., <전자신문>
 - 20) '에볼라 바이러스, 11개월 만에 진정 국면', 2015.1.23., <조선일보>
 - 21) '공단·심평원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시 '당사자 통보' 의무화', 2015.1.27., <라포르시안>